

노동청, 학동 재개발 공사기간 현장 관리·감독 뭘 했나

발암 물질 석면 철거작업 불법 다단계 하도급 전허 파악 못해 백술건설 면허 빌려 석면공사·계획서 달리 철거조차 몰라 경찰, 부실 관리·감독 확인 위해 노동청·동구청 압수수색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시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공사가 지난해 7월 이후 고용노동부로부터 한번도 지도·감독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라다보니 1급 발암물질인 석면철거작업이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받은 건설사를 통해 이뤄졌는데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가 하면, 석면철거가 끝난 이후에도 석면이 발견되는 등 부실한 공사 정황이 경찰 수사로 확인되고 있다. 붕괴사고가 난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이 불법 다단계 하청을 거치며 안전과 산재예방조치가 부실해졌고 작업환경도 위험한 상황에 노출됐다는 점에서 노동부의 안전한 지도·점검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20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의 석면 철거 공사에 대해서도 '불법' 재하도급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재개발조합측은 석면철거공사 업체로 다윈이앤씨와 지형이앤씨를 선정, 계약을 했다. 다윈이앤씨는 지난해 6월 백술건설과 계약을 체결, 석면 철거 공사를 맡겼다. 다윈이앤씨가 백술에 재하도급한 공사는 '불법'이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 백술건설은 당시 석면해체 면허가 없어 다른 회사(대인개발)가 보유한 면허를 빌려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석면해체 제거업자 면허' (2020년 11

월)를 취득했다는 게 경찰 수사 결과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그러나 석면 철거 공사의 신고·접수·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만큼 당연히 알고 있어야 했지만 파악조차 못했다. 불법 재하도급 여부나 부실한 업체의 철거 공사 진행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생색내기식 현장 점검에 대한 비판도 터져나오고 있다. 광주지방노동청 담당자는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7월 10일 현장 실사를 나가 석면철거계획서대로 지켜지는 지 여부를 감독했다"고 밝혔다. 석면철거계획서는 지난해 7월 대인개발이름으로 광주지방노동청에 접수됐다. 결국, 경찰 안팎에서는 백술건설이 석면철거계획서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마구잡이로 석면 철거 공사를 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상황이다.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은 이날 공개한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서'를 들

어 부실한 석면 처리 공사와 노동청의 허술한 점검 실태를 지적했다. 밀봉 작업 후 폐기 처리해야 한다는 석면 철거 계획과 다르게 현장에서 석면 조각들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광주일보가 확보한 석면 철거계획서는 학동 629-18번지 일대 석면함유물질이 9809.61㎡(텍스 177.65㎡, 슬레이트 9233.73㎡, 밤라이트 398.23㎡ 등)에 이르는 점, 작업장 주변 바닥 내부 비닐 설치-습윤제 살포-원형유지 제거-0.15mm의 비닐 사용 포장밀봉-폐기물 처리-작업자 샤워 후 환복 등의 방식으로 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문에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백술건설이 다른 회사의 면허를 빌려 석면 철거 공사를 진행한 사실조차 모르는가 하면, 계획서와 달리 철거되는지 여부도 몰랐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환경단체들도 지난 17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현장에서 계획서대로 밀봉 처리되지 않은 석면 슬레이트 조각들이 발견됐다고 폭로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노동청이 석면 철거 현장을 확인하고 자치단체는 폐기물 처리가 제대로 돼 있는지를 챙겨야 한다"며 "석면을 철거하는 작업이 불법 하도급을 통해 이뤄졌다면 현장에 석면 잔재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석면철거계획서가 모두 10명(석면 해체 및 제거 5명, 포장 등 5명)의 작업 인부를 필요로 하고 있지만 대인건설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인원이 고작 1명이라는 점에서 전문 작업을 일용직에게 맡겼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읍암기·읍암기특장차·오염제거구입·이동식틀비계가 각 1대씩을 활용할 인원조차 없다는 얘기로, 이들의 안전 교육 여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게 노동청 현실이다. 경찰이 부실한 석면철거 관리·감독에 따른 정황을 파악, 광주지방노동청과 동구청 기구환결과를 압수수색한 이유이기도 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평권마을 수공예품 판매 주말장터 20일 광주 남구 양림동 평권마을 일원에서 수공예품을 전시 판매하는 주말장터가 열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순천시 빗길에 승용차 중앙선 침범 4명 사망

3명 부상...정원 초과 피해 커

새벽,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과 정면 충돌해 모두 4명이 숨졌다. 20일 순천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새벽 4시께 순천시 용당동 편도 2차로 도로에서 A(22)씨가 몰던 K7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마주오던 B(54)씨가 몰던 카니발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K7승용차에 타고 있던 6명 중 뒷좌석

에 타고 있던 20대 4명(남1·여 3명)이 숨졌다. K7승용차 운전자인 A씨와 조수석에 동승한 1명은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카니발 승용차 운전자 B씨도 부상을 당했다. K7 탑승자들은 모두 지역 같은 대학에 다니는 친구 사이로, 정원을 초과해 탑승하면서 피해가 컸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양측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손실 채권 빼돌리고, 담보 대출 뇌물 받고

공금 횡령 전 새마을금고 이사장·직원 징역형 선고

수 년간 공금을 횡령한 전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직원에게 징역형(집행유예)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이승철)는 업무상횡령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A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B(62)씨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500만원, 추징금 1352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전무 C(51)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800만원, 추징금 1352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C씨의 경우 1심과 달리, B씨의 지시에 따라 일부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액을 원심(5500만원)보다 감액했다. B씨 등은 자신들이 다니는 새마을금고에서 상각 처리(장부상 손실 처리)된 채권을 회수한 뒤 빼돌리는 방식으로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1500만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 2007년 허위 담보물로 7000만원을 부당 대출해준 사실이 감사에 적발될 것을 우려, C씨 명의로 대출받아 변제한 뒤 해당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공모했다는 게 수사기관 판단이다. 이들은 또 A새마을금고의 부동산 담보 대출 실행 과정에서 필요한 근거서류 설정 등기를 B씨 동생이 근무하는 법무사사무소에 의뢰해주는 대가로 수십차례에 걸쳐 27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금융기관 임직원들로 공금수수 등 비위를 저질렀고 범행 내용, 기간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B씨 주장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운암 3단지 철거공사 수사 왜 더딘가

학동 4구역과 유사한 정황에도 북부경찰, 서류조차 검토 안해

북부경찰의 '운암 3단지 재건축 철거 공사'에 대한 수사가 더디게 진행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 철거공사'와 유사한 부실·불법 공사 정황이 엿보이는데도, 관련 서류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경찰 입장이 나오면서다.

20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북부청은 지난 14일 운암 3단지 재개발 철거공사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했지만 경찰은 관련 서류 검토를 진행 중이다. 앞서, 북구는 운암 주공 3단지 재건축 사업장 내 해체공사와 관련, 건축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GS건설, 한화건설, 철거공사를 하도급 받은 문안환경 등 총 4곳의 업체를 고발했다. 철거 공사 과정에서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에 서처럼 해체계획서대로 철거하지 않은 점, 철거 과

정에서 별도의 안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이 발견됐다는 게 북부 설명이다. 현장 안팎에서는 철거공사를 하도급받은 문안환경의 경우 경기도 포천에 사무실을 둔 외지 업체로 중장비를 동원하기 쉽지 않은 여건을 고려하면 지역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줬을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관련 자료 조사를 진행중"이라는 경찰 입장과 관련, 지나치게 느긋한 것 아니냐는 지역 건설업계와 시민단체 등의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된 데 따라 자료 조사를 진행하는 단계로 최대한 빨리 수사를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